

“제 역할 여기까지”...조국 법무장관 전격사퇴

“국민들께 죄송, 젊은이들에 미안... 검찰개혁 계속돼야”

취임 35일만에...문 대통령 사표 수리, 김오수 차관 대행

조국 법무장관이 14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관련기사 3, 4면>

이에 대해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사의를 수락하고 검찰개혁 후속 작업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입법부 차원에서 향후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여권이 내년 4·15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을 놓고 있는 ‘조국 정국’에서 조속히 탈출해 ‘검찰 개혁’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 제기과 이어진 검찰 수사가 사퇴의 직접 배경이었음을 비교적 명확하게 밝혔다. 조 장관은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 유 불분하고, 국민들께 너무나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는 이어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은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은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심정을 직접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조 장관은 취임 이후 한 달여 동안 밀어붙인 검찰개혁에 대해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시길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법무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38분 조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오수 차관이 당분간 장관 대행으로 직을 수행한다. 이런 가운데 김 차관의 차기 장관 내정설이 흘러나와 주목된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 차관은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88년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20기로 검사에 임용됐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기 전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46년 역사’ 檢 특수부, 광주·서울·대구만 남기고 폐지

명칭 반부패부로 ... 오늘부터 4개청 특수부→형사부 변경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그대로 유지...조국 가족 수사 포함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가 서울·광주·대구 3개 검찰청에만 남고, 나머지는 폐지된다.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규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18개 검찰청 중 현재 특수부가 있는 곳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개청이다.

중요도가 가장 큰 서울 이외의 광주·대구 특수부를 존치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조 장관은 “대검찰청의 판단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특수부 축소·폐지는 15일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된다.

다만, 시행일인 15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던 특수수사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조 장관은 “직제를 개편한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 진행 중인 가족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

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4부 4개 부서, 검사 40명으로 이뤄져 있다. 존치되는 광주·대구지검에도 특수부서가 1개 있으며 광주 특수부에 5명, 대구에선 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사라지는 수원·인천·부산·대전 4개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들 4개 검찰청에는 특수부서가 각 1개 설치돼 있으며 부서당 4~5명의 검사가 근무 중이다. 20명가량의 인력이 형사부로 전환되는 것이다.

존치되는 특수부가 맡는 수사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한다. 법무부는 현재 특수부 분장 사무는 ‘검사장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사실상 모든 사건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을 이달 중 제정해 장시간·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검찰의 1회 조사는 총 12시간(조서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심야조사는 밤 9시~새벽 6시 사이 조사로 규정했다. 피조사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는 한 심야조사는 제한한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강화하기 위한 감찰 규정도 이달 중 개정한다. /연합뉴스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 일괄전환

당정청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2025년에 자립형사립고와 외고·외국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 하는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우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을 안건으로 다뤘다.

이 안건에 따르면 우선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계획을 보고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이들 학교를 상대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대신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편다고 밝혔다.

일반고 전환 학교 대상의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일반고 전환 후에도 동일한 학교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국단위 모집하는 일반고(52개교)를 광역단위 모집으로 변경해 ‘솔림 현상’을 예방하기로 했다.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등으로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됐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또한 대입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고입 단계에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시·도 교육감, 교육단체, 교육자치 정책협의회 등이 단계적 전환이 아닌 일괄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일괄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김삿갓도 반한 국화동산에서
2019 화순
국화향연
2019.10.25.(금) - 11.10.(일)
화순읍 남산공원 일원 17일간